

■ 화제의 뉴스 ■

용인경전철 사업, 1조 원대 주민소송에 휘말려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을 꾸려 해마다 5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다. 용인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의 책임자로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수요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 건설업체 관계자 및 용인시의원 등을 지적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송단은 전·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에게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책임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는 ‘뺑뚱기 수요 예측’으로 사업성을 부풀리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책임을, 용인시의원을 상대로는 사업 심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송단은 용인시가 2004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포함시킨 ‘최소운영 수입보장’ 조항(이용객 수가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적용함으로써, 연간 473억 원의 적자를 용인시에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소송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용인시는 60일 안에 전·현직 시장과 시의원, 사업관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산정한 액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선례가 남는다면, 그간 지방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각종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기사]

- 한겨레 - 장밋빛 예측→세금 낭비, 주민이 ‘대형 전시성사업’에 경종(2013. 10. 11.)